

UNCED, 그 이후의

〈상〉

—에너지 정책 바뀌어야

역사 적이며 사상 최대라고 하는 UNCED 회의가 끝났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카니발의 나라에서 환경 카니발이 끝난 것이다. 애초에 이 회의는 강대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목조르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고, 말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고 해서 모였지만, 지구의 환경문제는 저 만치 밀어 놓고, 국익을 앞세운 경제문제가 판을 친 회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8개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 많은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브라질에 갔다 왔다. 그리고 모두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겁을 잔뜩 먹고 갓었던 환경관련 기준에 의한, 무역 규제문제가 다행히(?) 잘 넘어가 시간을 벌었다고 회회라락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의에 참여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준비가 소홀해서 너무나 방대한 회의에 우왕주왕하고 왔다고 실토했다.

어찌 되었거나, 회의는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특히 外富內貧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UNCED회의 이후의 대책을 살펴 본다.

에너지 정책 180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세계 1위다. 그만큼 공해 발생 정도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고, 쏟아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진솔한 표현일 것이다.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글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거나 또는 늘어난다고 하여도 2~3% 정도에 그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이후 계속 10%를 넘어서 1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들어 지난 1/4분기동안의 에너지소비는 총 3천 63만 3천톤(석유환산)으로 지난해 보다 15% 가량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수치는 이 기간중 무연탄 소비가 30%이상 늘어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증가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부를 외국에서 들여 오므로 더 쓴 만큼 외화 지출도 늘어나고 해외 의존도 역시 높아진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1백 25억 9백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8백 15억 4천만 달러의 15.3%를 차지했다. 해외 의존도로 따지면 91.2%를 기록한 셈이다.

이같은 에너지 소비로 원유 도입이 지난해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말 현재 1억7천4백60만 배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1억2천5백만배럴에 비해 무려 39.6%나 증가했다.

이같은 에너지의 소비증가에 따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보다 더욱 높아져 3월 현재 94.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에너지 수입액이 1백 4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에너

대책

한다—

지 과소비가 국제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문제중, 가장 심각하게 들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 과소비이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50%이상씩 남아 돌던 전기가 급기야 지난해 여름철에는 범국민적인 절전 운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제한송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조정을 두차례나 실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경제기획원이나 동자부, 한전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의 전력사정 역시 지난해 보다 나쁘면 나쁘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은 실제로 올해 예상 최대 소비전력이 18%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내의 모든 발전소를 가동해도 예비전력은 2%의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전력이 이정도 수준에 머물 경우, 원전 1기만 고장나더라도 당장 수급조정과 같은 비상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1년중 전기의 소비가 최대치에 이르는 올 여름이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우리의 에너지소비에 있어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것이다.

GNP가 한 단위 높아질때 늘어나는 에너지의 증가율을 말하는 에너지의 GNP탄성치는 우리의 경우 1.5(90년)이다. 성장률을 1% 높이려면 에너지를 1.5% 더 써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에 비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자가용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 자가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구조가 사글세 방에 살면서도 자가용차를 굴리게 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기술을 선진국으로 부터 고스란히 이전 받아 놓고, 그걸 산업발전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해 미국은 0.2, 서독 0.49, 일본 0.71, 프랑스 1.3이다.

반면 석유로 환산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2.17톤으로 미국의 7.9톤, 서독 4.26톤, 프랑스 3.63톤, 일본 3.52톤에 비해 절대량으로는 훨씬 뒤지고 있다. 결국 선진국보다 적게 쓰면서도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 에어컨 등 에너지의 다량 소비상품이 급속히 늘어났고, 산업구조 역시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가용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 자가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구조가 사륜세 방에 살면서도 자가용차를 굴리게 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전 받아 놓고, 그걸 산업발전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문제될 때마다 하는 식으로, 솔선수범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 중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건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주유소의 영업시간 단축, 내온사인의 가동시간 조절 그리고 사우나 등 유흥시설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4년간의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평균 GNP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전력소비가 공장가동과 같은 생산부문보다 비생산부문에 더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부문별 전력 소비 증가율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88~90년중 산업용 전력소비는 평균 11.5% 증가한 반면, 업무용은 22.7%, 주택용은 15.9%씩 늘어났다. 90년 한해만 보더라도 산업용은 12.9%인데 비해 업무용은 24.0%, 주택용은 17.0%로 비생산부문이 전력소비

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가정용 에어컨은 작년까지 2백만대 정도가 보급, 한여름 에어컨에 들어간 전력이 전체 수요의 21.6%인 4백만kw나 됐다. 이는 1조5천억원의 돈을 들여 6~7년 걸쳐 짓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전력 생산량이 90만~95만kw이므로, 결국 한여름 에어컨이 원자력발전소 5기의 생산분을 몽땅 끌어다 쓴셈이 된다.

그래서 전력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이런 전력 사정의 어려움은 '93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93년까지는 완공될 발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발전소를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대책은 전기를 아껴 쓰는데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 협조>니, <국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니 하는 따위의 국민을 에너지 낭비의 원흉으로 몰아치는 따위의 수단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화에 국가적인 대책을 경주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의 산업구조를 저 에너지, 공해의 자원절약형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의 편성 심지어는 실속 없이 방만한 현재의 행정체제도 정비 되어야 한다. 즉, 그런 모든 것들이 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인 대책 방향으로 재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먼 미래까지는 못 보더라도 최하, 1~2년의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筆者：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